

1. 정답 ③

해설 ① 1530년 독일의 「제국경찰법」에서의 경찰이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. ②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·위생·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하였다. ④ 프랑스의 「지방자치법전」은 "자치경찰은 공공의 질서·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"라는 규정을 두어,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적 사무가 여전히 경찰의 직무에 포함되었다.

2. 정답 ① / ㉠

해설 ㉠ 공공의 신뢰확보 ㉡ 공정한 접근 ㉢ 공공의 신뢰확보 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

3. 정답 ③

해설 ① 인적 관할이란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. ②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'범죄의 수사'를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하고 있다.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4. 정답 ④

해설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 하여야 한다.

5. 정답 ③ / ㉠ ㉢ ㉣

해설 ㉡ 경찰청장 ㉢ 대통령 ㉣ 경찰청장

6. 정답 ① / ㉠

해설 ㉠ 동예가 아니라 부여이다. ㉡ 관인(공무원)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는

삼국시대(백제)이었다. ㉢ 안찰사는 고려의 지방장관이고, 조선의 지방장관은 관찰사이다. ㉣ 「경무청관제직장」은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다. ㉠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조직은 변화하였으나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적 변화는 없었다.

7. 정답 ④

해설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8. 정답 ③

해설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에서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·경감·경위·경사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.

9. 정답 ④

해설 경찰긴급권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의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이므로, 그 발동에는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.

10. 정답 ④

해설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, 가스차·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11. 정답 ② / ㉡ ㉣

해설 ㉠ 임의보호 대상자가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다. ㉡ 억류 또는 피난조치의 대상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

다. 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12. **정답** ④ / ㉠ ㉡ ㉢

해설 ㉠ 불심검문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. ㉡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(경직법 §3 ②) 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, 동행 장소,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.(경직법 §3 ⑤)

13. **정답** ④

해설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를 통합(직무충실·직무확장)해야 한다.

14. **정답** ④

해설 사전통제 - ㉠㉡㉢, 사후통제 - ㉣㉤ / 내부통제 - ㉥㉦, 외부통제 - ㉧㉨㉩

15. **정답** ①

해설 품목별 예산(LIBS)은 기능의 중복이 심하며, 계획과 지출이 일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.

16. **정답** ④ / ㉠ ㉡ ㉢ ㉤

해설 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7. **정답** ③ / ㉠ ㉡

해설 ㉠ 1급 비밀은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㉡ 비밀관리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8. **정답** ②

해설 $3 + 6 + 3 + 7 = 19$

19. **정답** ②

해설 범죄패턴이론이란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.

20. **정답** ④

해설 ① 경찰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의미한다. ②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. ③ 순찰팀의 수는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,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한다.

21. **정답** ③

해설 숙박업, 목욕장업,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풍속영업에 해당하며, 미용업은 제외된다.

22. **정답** ① / ㉡

해설 ㉠ 보호시설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·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다. ㉡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다. 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(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)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

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23. **정답** ② / ㉠

해설 ㉠ 통신제한조치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에 근거하는 강제수사이다. ㉡ 이용자의 인적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ID, 가입·해지일자)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근거하는 통신자료에 해당한다. ㉢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의해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.

24. **정답** ④

해설 ① 외표검사에 대한 설명이다. ②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.

25. **정답** ③ / ㉡ ㉢

해설 ㉡ 주거침입죄 ㉢ 사기죄 / 혹시 강명수와 공손모가 폭포에서 유학협상을 했니? - 강추(업·피×)

26. **정답** ② / ㉠ ㉡

해설 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은 응급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에 해당한다. ㉢ 격리나 인도의 응급조치는 격리 시나 인도 시로부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.

27. **정답** ② / ㉠ ㉡

해설 ㉠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

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·보존하여야 한다.

28. **정답** ②

해설 Key ⇨ 중간 차단

29. **정답** ①

30. **정답** ③

	범칙금	벌점
60초과	12만원	60점
40초과 60이하	9만원	30점
20초과 40이하	6만원	15점
20이하	3만원	-

31. **정답** ②

해설 주차금지(터다 화3 소도5 - ㉠㉡㉢ / 주·정차금지 - ㉣㉤㉥)

32. **정답** ②

해설 ㉠ 5 ㉡ 2 ㉢ 3 ㉣ 2 ㉤ 2

33. **정답** ②

34. **정답** ④

해설 ① 집회·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·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. ② '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'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. ③ 경찰관서장이 질서

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미리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설정하여야 한다.

중점을 두고 있다.

35. **정답** ③

해설 ① 심리전은 비무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비무력 전술이다. ② 전략심리전에 해당한다. ④ 공연성 심리전과 비공연성 심리전은 주체에 의한 분류이다.

36. **정답** ① / ㉠

해설 ㉠ 「국가보안법」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며,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. ㉡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. ㉢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, 특수잠입·탈출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다.

37. **정답** ④

해설 ① 7일 이내에 신고한다. ②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또는 10일 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. ③ 7일 이내에 신고한다.

38. **정답** ③

해설 「범죄인 인도법」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범죄인 인도의 제한원칙은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이다.

39. **정답** ③

해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

40. **정답** ②

해설 개도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연대움직임으로,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